
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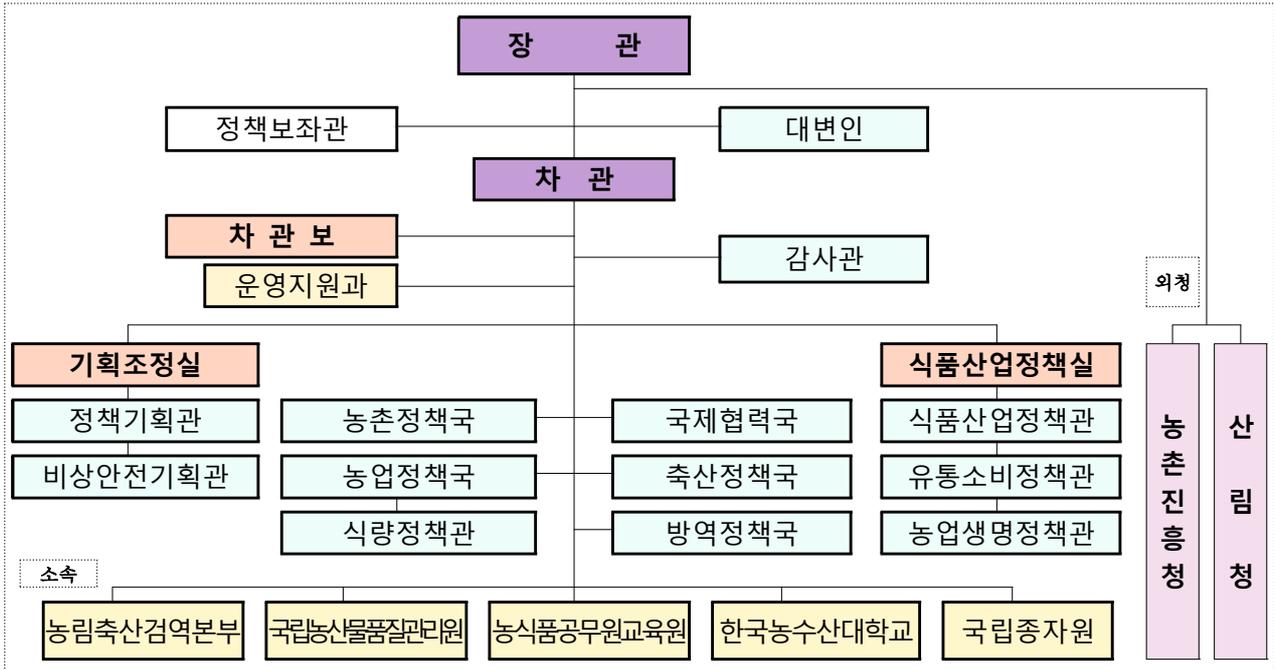
2022. 8. 10.

목 차

I. 일반 현황	1
II. 핵심 추진과제	2
①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	2
②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	4
③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	6
④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	7
⑤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	8
III. 규제혁신 방안	10

I. 일반 현황

① 기구 및 조직 현황 : 1차관보 2실 5국 8관, 5개 소속기관, 2개 외청



② 인원 현황 : 정원 3,666명(본부 630명, 소속기관 3,036명)

구분	직급별	계	직급							
			정무직	고공단	3.4급	4급	4.5급	5급	6급이하	기타*
합계	정원	3,666	2	26	17	95	73	582	2,755	116
	현원	3,523	2	23	17	94	67	589	2,620	111
본부	정원	630	2	16	13	33	53	208	300	5
	현원	624	2	14	15	34	52	211	293	3
소속기관	정원	3,036	0	10	4	62	20	374	2,455	111
	현원	2,899	0	9	2	60	15	378	2,327	108

* 기타 : 별정직(정책보좌관), 특정직(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) 등

③ 예산 현황 : '22년 예산은 16조 8,767억원(국가전체비 2.8%, 전년비 3.6% ↑)

- (재원별)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5개 회계(8.8조원),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7개 기금(8.1조원)으로 편성
- (부문별) 농가소득·경영안정(26.1%), 양곡관리·유통혁신(24.4%), 재해 대비·기반정비(12.0%), 농촌복지·지역개발(8.1%) 등 분야로 구성

Ⅱ. 핵심 추진과제

①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

□ 개요

- 국내 생산량 감소, 수입 물가 및 원재료비 상승 등으로 오름세
 - * 농축산물(전년동월비, %) : ('22.4) △1.7 → (5) 4.3 → (6) 5.1 → (7) 7.7
 - * 가공식품/외식(전년동월비, %) : ('22.4) 7.2/6.6 → (5) 7.6/7.4 → (6) 7.9/8.0 → (7) 8.2/8.4
- 우크라이나 사태, 폭염·집중호우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, **추석(9.10)을 정점**으로 농식품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
 - * 농축산물 물가는 추석 전 2~3개월 상승세를 보이다가 추석 이후 하락 경향
 - * 국제 밀 선물가격(\$/톤) : ('21.1) 241 → ('22.1) 284 → ('22.5) 419 → ('22.7) 296
- **추석 물가 관리**에 집중하면서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**국내 공급과 해외수입을 확대**하고, 서민·농가 부담 **완화** 추진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- (**추석 물가 안정**) 이른 추석 수급 불안에 대비, '**성수품 수급대책**' 추진
 - ※ 「추석 성수품 수급대책」 주요내용은 추후 별도 발표 예정
- (**국내 공급 확대**) 무·배추·사과·배 등 주요품목 **재배 확대 및 작황 관리**
 - 수급 불안 우려 품목 **신규 재배면적 확보**(고랭지 배추 100ha, 감자 310ha)
 - * (배추) 정식(7월말~8월) → 수확(9월말~10월), (감자) 파종(8~11월) → 수확(11월~'23.3월)
 - 관측정보 제공, 인력 지원, 농자재 지원* 등을 통해 영농 위축을 방지하고, 재해 대비 및 생육관리 강화
 - *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80% 보조,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(농가당 1억원, 1.5조원, 1%)
 - 수급 불안시 **비축물량* 방출** 등 긴급 수급조절 조치 시행
 - * [정부] 40천톤(배추 6, 무 2, 마늘 6, 양파 20, 감자 6), [농협] 148천톤(배추 78, 무 70)

○ **(수입 확대) 국산 공급부족 품목***에 대해 **신속한 국내 도입** 추진

- * (축산물) 돼지고기(7만톤), 소고기(10만톤), 닭고기(8만톤) 등 할당관세
- * (양파·마늘) TRQ 기본물량(양파 21천톤, 마늘 10) 우선 도입(7~9월) 후, 추가 수입
- * (감자) 호주산 7백톤(7~8월) 후 美산 추가 수입
- * (배추) 수출업체용 16백톤 수입(8~9월)



- 소고기·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은 **7.20일부터 수입 개시**(돼지고기는 6.22일부터 수입되면서 하락세)
 - * 삼겹살(냉장) 소비자가격 : (6월 중순) 29,270원/kg → (7.31) 26,200 (△10.5%)

○ **(서민부담 완화) 식품·외식 가격인상 최소화**, 소비자 부담 직접 경감

-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품목* 및 TRQ(저율관세수입) 물량(가공용 대두, 참깨) 확대,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% 지원(3분기 밀가루 공급가격 동결)
 - * (1차, 6.22~) 대두유 등 7개 품목 → (2차, 7.20~) 전지·탈지분유 등 10개 품목
- 농축산물 할인 쿠폰(20~30%) 지원 확대(당초 390억원 → 1,080), 김치·장류 등 단순가공식품 및 수입기호식품 부가세 면제(~'23)

○ **(불공정행위 근절) 원산지·이력표시 위반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 강화***

- * 추석선물 공급업체, 대형마트,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추석 전 3주간 실시

【추석 성수기 시장교란 행위 단속 계획】

- ▶ 원산지 : 제수·선물용 농식품 부정유통행위 특별단속 및 홍보 추진(8.16~9.9)
- ▶ 안전성 : 제수·선물용 농산물 안전성 조사(8.8~9.8), 도축장 특별 위생점검(8.16~9.8) 추진
- ▶ 부정유통 : 양곡표시 및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 등 농식품 부정유통 방지 지도·단속
- ※ 위법·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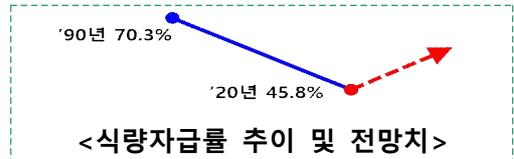
□ **장애요인과 대응방안**

- 농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농업인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시 사료비 등 **생산비 경감*** 지원 검토
 - *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보조, 사료자금 저리 융자 등
- 채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**산불**(22.3, 강원·경북) **피해지 일부**(150~200ha)를 **고랭지 채소 재배지**로 조성 추진(금년 하반기 후보지 조사)

② 외부 충격에도 굳건한 식량주권 확보

□ 개요

- 기후변화, 물류 차질,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곡물 가격 급등*
* (밀) 평년대비 약 57% 상승, (대두) 66%↑, (옥수수) 70%↑ ('22.7월 기준)
- 밀·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자급률이 저조**하여 대외 충격에 취약
* 식량자급률 현황('20) : 전체 45.8%, 쌀 92.8%, 밀 0.8%, 콩 30.4% 등
- 그동안 지속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윤석열 정부에서 상승 전환시키고,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추진

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- **(분질미* 활성화)** 이모작이 가능한 분질미로 **수입 밀가루 10% 대체**(~'27)
*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로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하여 일반 쌀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
- 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지원, 전문 생산단지 조성(~'26, 4.2만ha), CJ 등 식품업계와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가공·유통·소비 체계 구축

※ 분질미 활용 제과·제빵업체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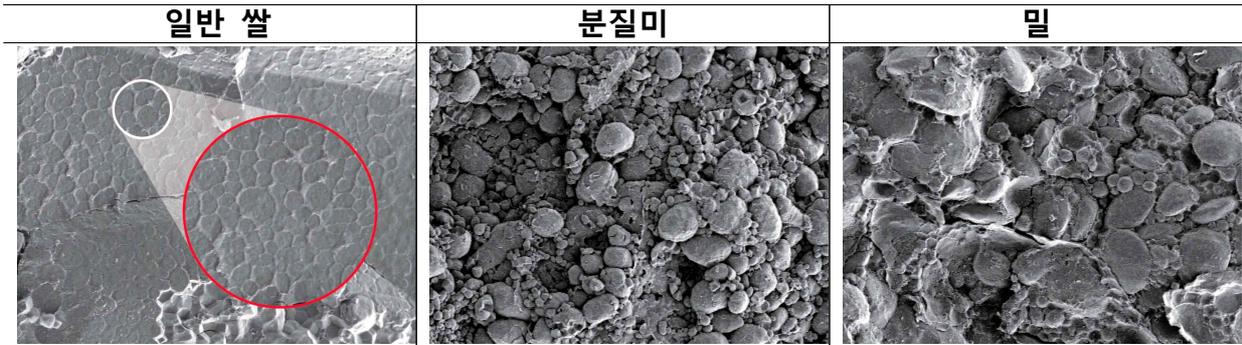
- ▶ (미듬영농조합법인, 평택) 분질미 활용 카스텔라를 생산하여 스타벅스 등에 판매
- ▶ (라이스베이커리, 부산) 분질미 등 쌀로 만든 제빵·제과류 등을 생산·판매

- **(밀·콩 자급률 제고) 생산기반 확충** 및 직불금(전략작물직불) 지원 확대
- **공공비축 강화*** 및 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설치(예타 진행 중) 추진
* 쌀·밀·콩 공공비축 : ('21) 385천톤 → ('22) 492
- 안정적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「적정농지 확보계획」 수립('22.11)
- **(해외공급망 확보) 민간 전문기업**의 해외 곡물엘리베이터(곡물유통시설) **확보*** 및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**국내 반입 활성화**** 지원('23~)
* ('21) 2개소, 곡물 수입의 3.5%(61만톤), **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보상 근거 마련(해외농업산림법 개정)
- **우크라이나 전후 복구**시 민·관 협력을 통해 식량 확보 기반 마련

- ※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, 국내 자급기반 및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를 위한 「**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**」 마련('22.10)

- (개념) 분질미는 가공용으로 개발한 쌀 종류로서, 전분 구조가 치밀한 일반 쌀과 달리 밀처럼 둥글고 성글게 배열되어 잘 부서짐

<분질미, 일반 쌀, 밀의 전분 구조 비교>



- (특징) 제분 및 가공적성 상 기존 쌀가루보다 밀가루 대체가 상대적 유리

- (제분) 건식 제분이 가능*하여 가공 비용 절감(습식 대비 50% 수준)

* 일반 쌀은 다각형의 전분 구조가 밀착된 구조로 단단하기 때문에 가루 입자 크기가 크고 건식 제분 시 전분 손상이 높음

- (용도) 일반 쌀에 비해 가루 입자 크기가 작고 건식 제분 시에도 전분 손상이 적어 상대적으로 다양한 밀가루 제품에 적용 가능

- 다만, 쌀 고유 특성상 빵, 면 등 일부 식품은 밀가루 대체를 위해 글루텐 대체·첨가가 필요하므로 품목별 가공적성 개선·연구 등 추진

- (재배) 늦모내기가 가능하여 남부지역에서 동계작물(밀)과 이모작에 적합

* 관행(모내기 6.1) 대비 늦모내기 시(6월말) 수량성 13%↑(419kg/10a→ 475) 향상

<밀-분질미 이모작 작부체계>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상	중	하	상	중	하	상	중	하	상	중	하
상	중	하	상	중	하	상	중	하	상	중	하
일반벼			분질미			일반벼			분질미		

일반벼는 모내기 시기가 밀 수확 시기와 중복

- (산업화) 현재* 제과제빵류, 주류(맥주, 전통주), 아이스크림 등에 활용

* (제과제빵) 미듬영농조합, 라이스베이커리, 미잠미과, 흥윤베이커리 등 8개 업체, (주류) 파머스 맥주, 크래프트 맥주, 문경와이너리 등 3개 업체, (아이스크림) 젤요

- 금년 예상 수확량 약 500톤 중 100톤은 CJ 등 식품기업에 제품연구용으로 제공

3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

□ 개요

- **고령, 소농** 중심의 농업 구조로는 농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 곤란
 - * 농업경영주 비중(40세 미만/ 65세이상) : ('90) 14.6%/ 18.3% → ('20) 1.2/ 56.0
- 미래 농업을 이끌 **청년 농업인을 대폭 확대***·육성하고 **디지털 기술, 푸드테크** 등을 농업에 결합, 생산성 향상 및 **신산업** 육성
 - * 청년농(40세 미만 경영주) : ('00) 91,516가구 → ('20) 12,426 → ('27) 30,000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 계획

- **(청년농) 교육·농지·자금·주거** 등 맞춤형 지원, 3만명 육성('27)
 - 분산된 청년농 사업 통합·패키지 지원, 지원대상('22. 2천명) 두 배 이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「청년농 육성 기본계획('23~'27)」 마련(9월)
 - ※ 청년농 육성·정착 사례 : 스마트팜 혁신밸리(전국 4개소, 연간 약 200명)
 - ▶ 스마트팜 교육(20개월), 임대형 스마트팜(약 500평/1인, 3년), 임대주택 제공
- **(스마트농업) 농산물 생산·유통·소비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**
 - 「(생산) 논·밭·온실 **스마트팜** → (유통·소비) 선별·포장을 자동화한 **스마트 APC**(산지유통시설) 및 **농식품온라인 거래소**(도매시장)」 구축
 -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·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장기 임대(최대 30년)
 -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팜 기술·서비스 제공 기업* 육성
 - * 스마트온실 선도기업인 Priva는 클라우드 기반 최적의 작물재배 서비스 제공
- **(융복합산업) 농업을 가공·관광** 등과 융복합, 부가가치 창출
 - 지역단위 융복합거점 조성 등 산업 규모 2배 수준 확대('22 27조원 → '27. 5)
 - ※ 청년 농촌융복합 창업 성공 사례 : ㈜에코맘의산골이유식 (경남 하동)
 - ▶ '12년 귀농하여 지역산 농산물('21. 28억원 구매) 활용한 이유식 개발·판매
 - ▶ 연간 매출액 증가('12. 1억원 → '21. 150억원) 및 일자리 창출(55명)
- **(수출 확대) '27년 농식품 수출 150억불 달성**('21. 85.6억불 대비 75% ↑), 스마트팜·푸드테크 등 농업 전·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
 - 중동시장 중심 「스마트팜 수출지원단」을 구성, 기업맞춤형 수출 종합지원

4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

□ 개요

- 농촌은 인구 유출,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및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확대

- 축사, 공장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* 심화

* 농촌주거지 내 또는 100m 이내 축사 66천개소 (전체의 21%), 유해물질 배출공장 5,211개소 위치



-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통합 지원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- (농촌공간계획) 농촌공간을 주거·산업·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, 생활권별 주거·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'농촌공간계획' 제도 도입

* 법적 근거로 「(가칭)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」 제정 추진('22.말)

- 지자체(시장·군수)는 주민 의견을 수렴(주민협정* 등 체결)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·군 단위 '농촌공간계획' 수립

* (주민협정) 마을 또는 생활권 주민간 사업방식에 대한 약속(예, 지붕색깔 통일)

- (통합지원) 정부는 지자체와 '농촌협약*'을 체결, 시·군 계획 이행 지원

* (농촌협약) 농촌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, 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계약

- 주거지 인근 축사·공장 이전·정비,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예산 통합 지원 → 농촌생활권 400개소 조성

*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괄보조 사업 및 농촌 삶의 질 관련 관계부처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

※ 농촌생활권 조성 우수 사례 : 경북 의성군 안계면 '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'

- ▶ 일자리 : 청년특화농공단지, 반려동물 복합문화센터, 월급제 스마트팜
- ▶ 주 거 : 임대주택(100~200세대) 건립, 빈집 리모델링 추진
- ▶ 생활서비스 : 5분내 응급의료서비스, 복합커뮤니티 센터 및 어린이집 신축 등

5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

□ 개요

- 반려인구는 늘었으나, 동물복지·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*,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인식 차도 커 **사회적 갈등** 존재
 - * 동물학대 5,497건, 개물림사고 2,197건, 유기·유실동물 118,273마리 ('21)
- **성숙한 반려동물 문화**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법·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지원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

□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

- **(동물복지)** 동물학대·유기자 처벌·제재를 **선진국 수준**으로 강화하고, 지자체 직영보호센터('21. 68개 → '27. 113) 등 **동물보호 시설 확충**
 - ▶ 동물을 학대하여 죽이는 행위: ('18) 징역2년 / 벌금2천만원 → ('21) 3년 / 3천만원
- **(개식용)** 이해관계자 **이견 조정**을 위한 설명·설득 등 사회적 대화 지속
- **(안전관리)** 반려견 및 맹견(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) **물림 사고 예방*** 강화
 - ▶ 맹견: ('19) ①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 이탈 방지, ②맹견출입금지장소 지정, ③안전조치 위반 사고시 벌칙(사망 3년/3천만원, 상해 2년/2천만원), ('21) 맹견보험 가입 의무
 - 맹견 **공격성 평가** 의무화(일반견은 필요시), 맹견 수입신고·사육허가('24.4~)
- **(진료비)**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항목 **표준화** 및 중요 진료비 **공시**, 중대 진료(수술 등) **예상 비용 사전고지** 의무화
 - * 지역별로 소비자단체 등과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·공개('23.상반기 1차 발표)
 - **표준수가제**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가능성 신속 검토('22~'23)
- **(산업육성)** 미용·펫푸드 등 유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산업 기준 등을 포함한 「**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**」 마련('22.12)

참 고

'22년 하반기 중요 대책 발표 일정(안)

발표시기	'22년 하반기 중요 대책(안)	소관
8월	■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	유통소비정책관
	■ 농산물 도매유통 개선 대책	유통소비정책관
	■ 농촌공간계획 법제화 추진(법안 발의)	농촌정책국
	■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	방역정책국
9월	■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('23~'27)	농업정책국
	■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방안	유통소비정책관
	■ 직불제 사각지대('17~'19) 해소 방안	식량정책관
	■ 특별가축방역대책('22.10~'23.2)	방역정책국
10월	■ 동물복지 강화 방안	농업생명정책관
	■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	식량정책관
	■ 스마트 농업 혁신 방안	농업생명정책관
11월	■ 중장기 적정농지 확보 계획	농업정책국
	■ 푸드테크 육성 방안	식품산업정책관
	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	농업생명정책관
	■ 해외농업개발 5개년 계획('23~'27)	국제협력국
	■ 낙농제도 개편 방안	축산정책국
	■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('23~'27)	농촌정책국
12월	■ 농업직불 확대·개편 로드맵	식량정책관
	■ 농식품 수출 확대 방안	식품산업정책관
	■ 농촌공간계획 세부 추진계획	농촌정책국
	■ 반려동물 산업 육성대책	농업생명정책관
	■ 동물 보건(의료) 중장기 발전 방향	방역정책국
	■ 농업·농촌분야 ODA 추진 전략	국제협력국

※ 상황에 따라 발표 시기는 일부 조정 가능

Ⅲ. 규제 혁신 방안

- **(추진현황)** 자체 규제개혁전략회의(장관 주재) 및 범부처 규제혁신 TF(기재부)를 통해 국민·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개선 추진
 - 업계·전문가 간담회를 **40차례** 실시하여 1차로 **175개 과제 발굴**

- **(혁신 방안)** 민간의 정비요구가 많고,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 민간 혁신동력 유입과 경제 활성화 기여
 - **(스마트팜)** 신기술 접목 농업시설(예: 수직농장) **농지임지규제 완화*** 및 **청년인력 유입** 등을 위한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요건 개선
 - * 농지를 해당 시설부지로 10년간 사용 허가,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허용
 - ※ 우량농지 확보와 산업단지 등 국토개발사업과의 조화를 위해 **농지 활용 협의 절차 개선**
: (현행) 6~8개월 소요 → (개선) 3~4개월
 - **(푸드테크)** 새로운 농식품산업의 진출·성장을 위해 대체식품, 메디푸드 등의 **생산·판매 기준 정비**(관계부처 협의)
 - * (사례) 인테이크(식물성우유 제조업체)는 식물성 원료로 우유 유사제품(소이밀크)를 제조하나 맞춤 표시·광고 규정이 없어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 전달 불가
 - **(반려동물)** 안면인식 활용 동물등록*, 이동식 화장(火葬) 실증 후 도입 등 **신기술·서비스 허용**과 국민 편의 제고
 - * (기대효과) 신체 삽입이나 분실 등 문제가 있는 기존 방식 대신 비문(鼻文) 등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편의 증진 및 펫보험 등 다양한 펫산업 활용 기대
 - **(유망기술)**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**유전자가위 적용 농산물*** 등의 생산·이용 **승인 절차 간소화** 및 기초연구 확대
 - * (예시) 토마토에서 단맛을 내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를 잘라내 단맛을 내도록 개량

- **(향후 계획)** 전문가포럼·현장 간담회와 연계한 **장관 주재 규제전략회의**를 운영하여 **과제 발굴** 및 규제혁파 지속 추진